

의견으로 채택되어 社會福祉 專門要員의 一般職 社會복지 직렬로의 전직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保健社會委員會에서 제안설명한 社會福祉 專門要員의 社會福祉職列 早期施行 促求 建議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회복지직렬조기시행
촉구건의안

우리 사회는 그 동안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세계 속의 한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체의 정착과 21세기를 바라보는 지금, 우리는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1세기를 바라보고 있는 지금은 세계화, 정보화 시대로서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가 절실히 요청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경쟁력 강화를 구호로 외치고 있는 현 정부에서도 조직의 비대화와 인원과잉, 허술한 인력관리 등 정부의 조직운영에 따른 비효율이 더욱 심해졌고 경쟁력 제고에 오히려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공무원 인력의 전문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가 당면한 국가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지는 인간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의 내용뿐 아니라 사회복지행정을 수행하는 복지행정가의 역할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국민들의 복지욕구 충족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다행히 1987년부터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인력들(사회복지전문요원)이 행정일선에 배치되어 현재는 전국 3,000명, 서울시에 317명이 21세기 복지국가 구현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용 10년이 지난 현실에서도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은 채용 당시

별정직으로 임용되어 신분상, 승진상의 불이익으로 업무추진시 의욕저하는 물론 사기저하로 발전 없는 답보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일반행정직 보직자와의 갈등 및 복지전달체계의 전문화 미흡으로 자신들의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데 많은 제약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대통령령 제13786호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92.12.26)을 통하여 행정직군내에 사회복지직렬이 설치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9월 5일 행정쇄신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전문요원 사회복지직 전직 확정」안건의 통과로 '96년 중으로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일반직화하는 것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는 현재 국비에서 보조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서울 50%, 기타 시도 80%)의 계속적인 국비보조 사전보장의 문제, 일반직으로의 전직시 갖은 인사이동으로 본래의 배치목적과 다르게 전문성이 저하되어 전문관리 부실 우려에 대한 보완대책의 문제, 전직시 다른 별정직 공무원의 연쇄적인 일반직화 요구 대두 및 복지행정 분야에 기존의 행정직 공무원을 포함한 전반적인 시·군·구단위 조직개편 등의 어려움 등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97년 5월 23일 광주에서 개최된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역대표단 사회복지부문 회의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직으로의 전환」이 건의사항으로 결의되어 청와대 등 관계부처에 건의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복지수혜자에 대한 생활상담 및 헌신적인 지원, 요보호대상자의 합리적인 책정 및 업무의 체계적인 관리, 그리고 지역복지자원 활용 등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활동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증명이며, 우리 나라의 질높은 복지행정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처우개선 및 사회복지직으로의 전직이 주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화시대의 도래와 함께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반에 관한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해 사회복지분야의 기획·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발전적 조직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사회복지행정 수행을 위한 조직의 신설은 시대적 요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전직 문제는 3,000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처우개선이라는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 복지정책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전반적인 행정의 경쟁력 강화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별정직으로 관리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사회복지직으로의 전직은 전국 3,000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사기양양은 물론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확립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21세기 복지비전제시를 통해 복지행정의 전문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직 사회복지직렬로의 전직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1997년 11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

25. 國立醫療院實却決定撤回促求建議案(保健社會委員會 委員長 提案)

(16時 05分)

○議長 文一權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4항 國立醫療院實却決定撤回促求建議案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保健社會委員會 朴南植議員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南植議員 안녕하십니까? 保健社會委員會 소속 朴南植議員입니다.

존경하는 文一權 議長,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을 모시고 최근 정부의 국립의료원 매각결정에 대한 철회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립의료원은 6·25전쟁 당시 의료진을 파견했던 스칸디나비아 3국과 국제연합한국재건단이라고 하는 UNKRA 등의 지원으로 1958

년 설립되어 폐허가 된 서울에서 의료시혜의 참모습을 구현한 이래 1968년 우리 정부에 운영권이 이양된 이후에도 줄곧 우리 나라 의학발전과 환자진료에 있어서 공공의료의 대명사로 일컬어진 유일한 종합병원입니다.

설립초기에는 첨단의료진과 의료시설을 갖춘 병원으로서 각광을 받았다가 민간대행병원이 속속 설립됨에 따라 최근에는 저소득층의 환자와 의료보호환자가 주로 찾고 있으며, 심장수술, 언청이 교정수술, 만성 심부전증 환자의 수용 등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누적되는 경영적자와 응급의료시설의 필요성을 이유로 국립의료원을 폐원하여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고 매각대금의 일부를 활용하여 국립응급의료센터와 암연구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하여 각계의 반발을 사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의료보호환자 등 저소득 시민의 의료시혜 축소와 공공의료 서비스의 양적·질적 수준저하가 우려되는 것입니다.

둘째, 본래 국립의료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부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는 점입니다.

셋째, 최근 일부에서나마 논의되고 있는 사보험 도입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넷째, 스칸디나비아 3국과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인 폐지결정은 설립취지 당사국 의견을 고려할 때 외교문제를 발생시킬 소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국립의료원 매각결정은 이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탁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保健社會委員會에서는 지난 11월 12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를 심의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채택함으로써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본 건의안이 우리 市議會의 일치된 의견으로 채택되어 정부의 잘못된 국립의료원 매각결정이 반드시 철회되어 우리 나라 공공의료 정책이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는